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526-01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전략과 과제

■ 일시 : 2014. 5. 13(화) ■ 장소 : 독일 베를린 독재청산재단 회의실

프로그램



| 시 간 | 내 용 |
|-------------|--|
| 09:30~09:45 | * 등록 |
| 09:45~10:15 | * 개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회 : 이은정 (베를린자유대 교수) • 개회사 : 윤남근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대독) • 축 사 : 송상현 (ICC 소장) Robert Grünbaum (독재청산재단 부사무총장) * 기념촬영 |
| 10:15~10:45 | * 기조연설 : 유엔북한인권 조사 활동의 성과 및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nja Biserko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 |
| 10:45~12:30 | * 1세션 : 북한주민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 Matthias Nass (Die Zeit 기자) • 패널 : 홍성필 (연세대 교수) Klaus Hoffmann-Holland (베를린자유대 인권대학원장) Marcus Lönning (연방정부 전 인권특임관, 2010 ~ 2013) |
| 12:30~14:00 | * 오찬 |
| 14:00~15:30 | * 2세션 : 서독의 대 동독 인권정책 시사점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 Sven Hansen (TAZ 기자) • 패널 : Ekkehart Krippendorff (베를린자유대 교수)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Richard Schröder (전 동독 인민회의 사민당 원내대표) |
| 15:30~15:50 | * Coffee break |
| 15:50~17:10 | * 3세션 : 해외 체류 탈북자 인권상황과 보호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 김정안 (동아일보 기자) • 패널 : 이은정 (베를린자유대 교수) Beate Rudolf (독일 인권위원장) 윤남근 (인권위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 17:10~18:00 | * 종합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라종일 (인권위 북한인권포럼 대표) |
| 18:00~19:00 | * 리셉션 |



목 차

- 개 회 사: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vi
- 축 사: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 x
- 인 사 말: 로버트 그린바움 (독재청산재단 부사무총장) / xii
- 기조연설: 소냐 비세르코 (COI 위원) / xiv

- 세션 1 | 북한주민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역할 / 1
 - 사회: Matthias Nass (Die Zeit 기자)
 - 패널: 홍성필 (연세대 교수)
Klaus Hoffmann-Holland (베를린자유대 인권대학원장)
Marcus Löning (연방정부 전 인권특임장관, 2010 ~ 2013)

- 세션 2 | 서독의 대 동독 인권정책 시사점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 방안 / 17
 - 사회: Sven Hansen (TAZ 기자)
 - 패널: Ekkehart Krippendorff (베를린자유대 교수)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Richard Schröder (전 동독 인민회의 사민당 원내대표)

- 세션 3 | 해외 체류 탈북자 인권상황과 보호 방안 / 35
 - 사회: 김정안 (동아일보 기자)
 - 패널: 이은정 (베를린자유대 교수)
Beate Rudolf (독일 인권위원장)
윤남근 (인권위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마무리 토론 / 45

- 언론보도자료 / 51

개 회 사



▮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오늘 우리는 혹독한 독재정권 아래에서 신음하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유세계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지혜를 모으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 참석해 주신 송상현 ICC소장님, UN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으로 활동하신 소냐 비세르코(Sonja Biserko) 위원님, 독일과 한국의 언론계, 학계, 정계 등 각계에서 활동하고 계신 전문가 여러분, 이번 심포지엄 공동개최기관인 베를린자유대학과 동아일보 화정재단, 이곳에서 오늘 행사를 개최하도록 도움을 주신 ‘사회주의통일당독재 청산재단(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의 모든 관계자들, 그리고 이 행사에 동참하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곳 ‘사회주의통일당독재 청산재단’에서 북한인권을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 재단이 소재하고 있는 베를린은 냉전의 벽을 허문 용기와 희망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분단이 시작된 슬픈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이곳 베를린을 찾아왔습니다. 독일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아픈 분단의 역사를 가졌지만 이제는 분단된 그때의 독일이 아닙니다. 24년 전인 1990년 10월 3일 두 개의 독일은 하나가 되었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가로 다시 태어났습

니다. 그러나 남북으로 갈라진 한반도는 아직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일성 일가의 3대 세습과 공포정치로 인해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은 전 세계에서 그 비교 대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수백만 명에 이르는 남북 이산가족들은 상봉은커녕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북한인권 상황은 지난 3월 17일 COI 최종 조사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번 COI 보고서가 북한정권의 인권침해 행위가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국제법상 반인도 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는 것입니다.

북한인권 문제는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까지 논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4월 17일 유엔 안보리에 출석한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은 북한정권에게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원칙을 적용하여 UN의 개입을 촉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권은 정치적 이념과 주권을 넘어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정권이 자신들의 체제유지와 주민통제를 위한 공포정치의 수단으로 반인권적인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그 존재만으로도 문명화된 21세기 전 인류의 치욕입니다.

2009년 인권위가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생활한 탈북자의 증언을 토대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북한에는 5개 수용소에 8만 내지 12만 명의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철저히 통제된 구역 내에서 일상적인 폭력과 고문, 혹독한 강제노역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용소에서의 일상생활은 그 자체가 인권침해의 결정판으로서 정치범수용소는 조속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열악한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권위는 서독의 대 동독 인권정책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독이전 서독에서 운영한 쾰스기터 중앙기록보존소(Die Zentrale Beweismittel- und Dokumentationsstelle der Landesjustizverwaltungen in Salzgitter)를 모델로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기록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북한정권의 인권침해 사례를 낱낱이 기록하여 공개하고 통일 후 책임자 처벌의 자료로 이용한다.

다면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행위를 억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자유세계에서는 인권의 소중함에 대한 교육의 자료로도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국으로 출발하여 인권신장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룬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에 필적한 만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2차 대전 후 독일의 경제부흥 과정은 한국의 경제개발에 있어서 훌륭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통일 전 서독의 대 동독 인권정책과 통일과정에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2001년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EU나 민간단체 등을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로서는 독일이 북한인권에 관하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북한당국자들을 만날 때마다 인권상황의 개선에 관하여 조언하고 주의를 촉구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적 인권 이슈로 부각되는 것은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이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국제평화나 안보와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인간의 존엄성이 확보될 때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인권이 확보되지 않는 평화는 무의미 합니다. 따라서 UN은 해마다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국회가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놓고 열띤 논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계인이 북한주민의 인권참상을 직시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COI보고서에서 언급되어 있듯이 그들의 삶은 인간으로서의 차마 볼 수 없는 박해와 고문 그리고 생명의 위협이 오랫동안 일상화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북한정권 스스로 반성하고 인권개선에 나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국제사회의 지혜를 모아 북한정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가 되었습니다. COI가 권고하는 사안들은 이러한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하는 점은 북한주민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주자는 것입니다. 북한주민들

에게 그들이 겪고 있는 고초와 아픔, 굶주림을 누군가 지켜보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있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지는 것입니다.

자유에 기반을 두고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인류문화는 반드시 전진하고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어떤 이념이나 제도로도 막거나 변형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권위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기초하여 북한인권에 대한 소임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인권 문제는 개선하기 힘들다고 결코 중단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우리시대에 맡겨진 소명입니다. 나는 북한주민이 하루빨리 마음껏 먹고, 자유롭게 보고, 듣고, 말할 수 있고 외부 정보와의 자유로운 접근을 통해 그들이 스스로 인권의식을 고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분단과 통일의 상징인 이곳 베를린에서 북한인권 상황을 걱정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마침내 북한지역에까지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북한주민들에게는 커다란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축 사



■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존경하는 신사 숙녀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아침 이곳 베를린에서 이렇게 저명하신 여러 청중 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관심사항을 주제로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하신 것에 대해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열정적이고 훌륭한 인권 운동가 여러분 덕에, 매우 유익하며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보고서 발간에 노력을 기울이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이 보고서는 오늘 행사의 논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소장으로서, 보고서의 내용이나 권고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전 세계의 심각한 인권침해의 희생자들에게 제가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는 것, 법치를 증진하는 것, 그리고 대량 학살을 방지하는 것은 국제사회 전체의 공통적인 관심사항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형사재판소는 중대한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여러 국가의 집단적 결의의 표현으로, 미래를 위한 역사적인 발걸음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분들의 노력을 언제나 치하하며 환영합니다.

이러한 인권침해 행위가 집 앞에서 혹은 지구의 반대편에서 일어나든, 오늘 행사와 같은 집

단행동을 통해, 시민사회, 다자간 단체, 국가 정부 및 여러 이해관계자가 함께 모여, 전 세계 모든 사람의 기본 인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멀리 있는 사람이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생존, 자유와 안전의 거부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모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러한 위치에 놓여야 하며 이러한 권리가 그들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다른 이들이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어떠한 종교, 국가 혹은 집단도 인권침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가슴 깊이 새겨야합니다. 1950년대 동안 우리가 겪은 전쟁은 한반도인의 삶을 찢어놓고, 끔찍한 잔혹행위로 고통 받은 이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희생자들을 낳았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와 여러분 한분 한분이 인간의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해 계속적으로 헌신하며, 타인과 의견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조화로운 노력은 더욱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중대한 디딤돌입니다.



오늘의 심포지엄이 우리 모두가 인간 가치, 존엄 및 자유가 위협 받는 곳에서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은 어린이, 남성, 여성을 비롯하여 모든 이들에 주어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권은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지키고, 보호하며 증진해야할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그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인류를 포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 로버트 그린바움 (독재청산재단 부사무총장)



존경하는 이교수님, 저명하신 초대손님들, 그리고 존경하는 숙녀 신사 여러분,

오늘 열리는 심포지움에 오신 여러분께 SED- 독재청산연방재단의 이름으로도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우리 독재청산연방재단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수 년전부터 한국의 파트너들과 깊은 연계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첫번째 만남을 가진 이후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 매우 활발하고 의미있는 교류를 해 왔으며, 서로 방문여행도 하고 한국과 독일에서 공동 행사들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권과 북한’이라는 주제하에 전개될 국제 심포지움의 초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매우 기쁘기도 합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과 독일은 지리적으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역사 발전상 많은 유사점을 보이면서 두 나라간에 특별한 연계성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양국은 1989년까지 매우 비슷한 운명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냉전 체제경쟁의 한가운데서 국토가 나뉘어, 한쪽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발전시켰고, 다른 한 쪽은 공산주의적 독재를 구축했습니다.

구동독에서 인권은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체계적으로 탄압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인권이 총체적으로 침해되었는데, 그 예로서 특히 의사표현과 정보의 자유 침해, 집회와 종교의 자유 침해, 언제든지 자신의 나라를 떠날 수 있는 자유의 금지, 임의적인 구금과 정치적 형사재판, 직업 금지, 사유재산박탈, 그리고 또한 독독경계지역에서의 발포명령과 시민들의 사생활에 대한 국

가의 체계적 감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구 동독에도 인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저 종이에 적힌 것에 불과했습니다. SED는 시민들이 국제적으로 명시된 그들의 권리에 대해 가능한 한 적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권리에 대한 인식이, 나중에 1980년대에 보여진 것처럼, 체제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저항을 유발하게 될 것임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자유와 인권에 대한 요구는 구동독에서 시민 권리 운동과 체제 반대 운동의 기반을 이루었고, 이 운동들이 하나로 엮여지도록 하였습니다. 자유와 인권에 대한 요구는 결국 독재와 장벽을 무너뜨리고 독일 통일의 길을 터 주는 계기가 되는 1989년 평화 혁명의 중심요소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독일인에게는 거의 25년 전에 일당독재와 폭력적인 분단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케 되었지만, 한국은 오늘날까지 공고한 분단 상태로 남아있고 한반도 북쪽에서는 사람들이 잔인한 체제속에서 고통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떻게 통일을 이룰 수 있을지 우리 독일인들이 한국인들에게 가리켜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두 나라의 역사적인 발전 배경이 근본적으로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독일인들이 한국인들에게 우리 경험의 한 자락을 전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한국인들의 곁에서 있어 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것 중 하나는 특히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국가는 장기적으로 보아 존재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러한 국가에서는 한 사회가 하나의 유기체로서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것은, 지치지 않고 끊임 없이 인권에 대해 요구하는 것이 체제반대운동과 이를 통한 독재정권의 붕괴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숙녀 신사 여러분, 이제 짧게 한가지 말씀드리고 저의 인사를 마칠까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이해하는 데 독재청산재단이 장소를 제공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부디 오늘의 심포지움과 강연들이 여러분에게 성공적이고 흥미롭게 다가가기를 바라고, 생각을 자극하고 좋은 대화들을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조연설



■ 소냐 비세르코 (COI 위원)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이처럼 중요한 컨퍼런스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초청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활동은 올해 3월 31 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위원 회의 동료들은 COI 보고서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도덕적인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정책 입안자 및 의사결정권자, 언론, 대중들이 북한의 끔찍한 인권유린 참상을 꼭 알았으면 합니다.

이러한 인식 제고를 통해 북한인권 문제가 유엔 회원국들의 논의주제에서 우선순위로 자리 잡고,

국제사회가 행동을 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북한 주민들은 도움의 손길을 받아야 하고 이들에 대한 인권유린도 종식돼야 합니다.

유엔 COI 북한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침해를 다룬 역대 보고서 중 가장 종합적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수년간 국제 NGO들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압력을 넣어 탄생하게 된 기구입니다. 비단 NGO뿐만이 아닙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모든 회원국들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설립을 찬성했습니다. 위원회의 설립 결의안은 기권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반대한 국가도 없었습니다. 이는 유엔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다른 접근법을 취할 때가 왔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수십 년간 북한은 교활한 수법으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들이지 않는데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수년간 국제사회가 집중했던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바로 그 답이 있습니다.

위원들을 선정하고 사무국을 설립하는 과정은 간단했습니다. 2013년 7월 초에 모든 관계자들이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7개월만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외부의 영향력 없이 독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는 보고서의 정확성, 명료성, 가독성과 위원회의 명료한 자격요건, 결론, 권고 등에 잘 반영되었습니다.

목격자들에 의해 밝혀진 북한 인권유린의 심각성, 범위, 기간, 성격은 북한을 현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전체주의 국가임이 드러났습니다. 불안정성, 안보 위협과 더불어 이런 현실은, 유엔 헌장에 비춰봤을 때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전 세계의 문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했던 업무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2013년 8월 중순에 대한민국과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북한은 방문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청회와 대화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니셔티브와 초청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특히 한국을 비롯한 인접국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약 26,000명의 탈북자가 있습니다.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가 내린 핵심 결정 중 하나가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었습니다. 80명의 목격자들은 공청회에 참석하는 용기를 보여줬습니다. 공청회는 우리가 임무를 시작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언론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온 모든 증언은 보고서에 반영되었습니다. 덕분에 보고서는 진정으로 “한국 사람들의 목소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을 탈출한 200명 이상의 희생자, 목격자 및 전직 관료들은 기밀 증거를 공유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보고서에 반영된 모든 인권유린 사건들은 희생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로 작성된 것입니다. 위원회는 각 사건에 대해 목격자와 제시된 정보의 신뢰성을 면밀히 평가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입증한 위성 영상도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북한은 수년간 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해 왔습니다. 기아와 방치에 대한 개인별 증언은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엔 기관이 제공한 보고서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또한 인권유린의 여러 양상은 북한 법에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인권유린의 양상은 북한 지도자들의 대중연설과 글에 드러난 방향도

반영합니다. 위원회 역시 북한에서 나온 내부 문서 및 구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의 기밀해제 문서로부터 통찰력을 얻고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 방문 이후 도쿄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주로 납북자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납북자 가족과 일본 NGO 대표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한국에서 그랬듯이 정부 관계자들과 회의도 가졌습니다.

위원회는 런던, 뉴욕, 워싱턴도 방문하며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과 공청회와 회의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한국의 복잡한 역사 및 전반적인 정치·사회 맥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위원회는 북한 관련 서적 및 출판물, 기사들을 연구했습니다. 매우 심도 깊은 업무였으며 까다로운 임무였습니다. 더 많이 알아갈수록 마음이 더 중요되었습니다. 북한의 치욕스러운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이 파고드는 것이 때로는 견디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인터뷰한 희생자가 강제적으로 존엄성을 상실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가장 아팠습니다. 그들은 비록 몸은 자유이지만 가슴속의 상처는 치유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정보와 증언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직도 약 80,000명에서 120,000명이 재판과 외부 접촉 없이 갇혀있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아마 살아서 나가기 힘들 것입니다. 그들은 서서히 노동과 기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1950년대 말부터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반 교도소의 수감자 수는 약 70,000명으로 추정되며 사망자는 연간 수천 명에 이릅니다.

많은 수의 수감자들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감금되었습니다. 가족 일원의 정치 범죄나 사회 배경으로 인한 연좌제로 인한 것입니다.

여성들이 가혹한 학대를 받는데, 특히 탈북을 시도하거나 강제로 송환된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여성들은 성적 모욕감과 폭력적인 학대를 받습니다. 해외에서 여성이 임신할 경우 강제로 낙태를 시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출산 후에 아이를 살해합니다. 한국인의 순수 혈통을 지키고 혼혈을 막기 위한 전략이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특정 그룹은 거의 몰살 당했습니다. 바로 기독교와 타 종교인들입니다. 1950년에 북한에서 24%의 사람들이 종교(대부분 기독교)를 믿었습니다. 2002년에 그 수치는 0.16%로 급락했습니다. NGO에 따르면 북한에는 현재 약 200~400,000명의 사람들이 비밀리에 기독교를 믿는다고 합니다.

잘못된 재판이나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도 정치범이나 기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처형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의 떠들썩했던 공개 처형은 단적인 사례에 불과합니다.

북한 당국은 북한 사람들의 신체적인 통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통제까지 하려 합니다. 어린 나이부터 사상을 체계적으로 세뇌시키고 통치자들의 개인숭배를 위한 국가차원의 선전을 쏟아냅니다.

경제 쇠퇴와 차별적 경제 정책으로 인해 많은 북한주민들이 빈곤과 영양실조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아사했던 1990년대 대기근으로 인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2세 중 27.9%가 신체적·정신적인 발육 부진이며, 그 중 8.4%는 상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는 생명과 자유뿐만 아니라 식량과 건강에 대한 체계적인 인권유린의 한 가지 지표에 불과합니다.

또한 북한은 인접국에도 인권 유린의 피해를 끼쳤습니다. 최근 수치에 따르면 북한은 수년간 한국, 일본, 중국 및 여타 국들로부터 20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납치하거나 강제 실종에 이르게 했습니다. 대부분은 6·25때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북한 요원들은 중국에서 납치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참혹한 인권유린 참상과 한반도의 불안정한 평화와 안보는 많은 면에서 긴밀하게 얽혀 있습니다. 북한은 대외 긴장을 전략적인 은폐수단으로 이용해 반체제 인사들을 외부 간첩으로 몰아세워 박해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사회·경제적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적으로 납치한 희생자들의 생사를 밝히지 않고 생존자들이 가족과 상봉하는 것을 거부하는 등의 태도 때문에 북한과 인접국간의 안보 대화는 좌절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북한주민들의 확실한 생각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정권에 대한 저항 사례가 있을까요? 어떤 형태의 저항이든 이를 시도하거나 고려하는 주민들이 있을까요? 분야를 막론하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 체계가 붕괴되면 사람들은 어떻게든 원시적인 시장을 형성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사례들을 들어봤습니다.

이러한 미미한 움직임들이 서서히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고, 습관을 바꾸고, 인생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북한에서는 단순한 공개 토론회조차 개최하거나 조직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은 변화하는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자국을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몰라도 스스로 생각하고, 불의를 목도하며, 저항의 목소리를 내는데 있어 저지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내부의 압력이 진정한 변화를 위해 필요한 임계 질량에 언제 도달할지, 도달 가능한지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혹은 순전히 타성으로 현 상황에서 계속 살아갈까요?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위원회는 북한이 국가 정책이란 명목 하에 반인륜적 범죄를 행했고, 행하고 있다는 정당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반인륜적 범죄에는 절멸(몰살), 살인, 노예화, 고문, 감금, 성폭행, 강제 낙태, 성폭력, 정치·종교·인종·성 차별적 박해, 주민의 강제 이전, 강제 실종, 고의로 기아를 연 장케 하는 비인도적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랫동안 북한에게 반인륜적 범죄를 촉발하는 체계적이고, 만연한 인권유린을 끝내라고 촉구해 왔습니다. 북한은 공개적으로 이런 촉구에 반항했고, 체계적 인권유린을 지속해 왔습니다.

위원회는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 주민과 국가 전체에 경제 제재를 가하지 말라고 권고를 통해 촉구했습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이유로 위원회는 정치적인 문제로 인도주의적 원조를 끊는 것을 반대하고, 인권과 인도주의적 원칙에 기반을 둔 원조는 지지합니다. 대신에 위원회는 지속되고 있는 반인륜적 범죄를 주도하는 개인에 대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또한 북한, 북한 주민과의 유의미한 관계 형성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북한에 영향력 있는 국가들은 인권에 대한 내실 있는 대화를 북한과 할 수 있도록 연락을 담당하는 그룹을 만들어야 합니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상과 새로운 발전사항 및 아이디어를 배우고, 모든 억압 정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인적 교류의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양심에 충격을 가한 범죄 앞에서, 대화와 접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책임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추가적인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젊은 리더 김정은의 결을 이제 새로운 세대의 고위 관료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들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다면 반드시 개인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OI는 UN안보리에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재를 채택하고,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알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위원회가 제시한 증거를 보면 참담한 현실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 역시 북

한 주민들을 북한 정부에 의한 반인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할 책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의석을 지닌 국가들이 이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3월 17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이사회는 보고서를 유엔안보리에 제출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아리아 절차(Arria procedure)를 통해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또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보좌하기 위한 현장 사무소 설치 권고를 승인했습니다.

뉴욕에 있는 프랑스, 캐나다, 미국의 유엔 대표부에 의해 4월 17일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는 언론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외교관 및 인권 활동가들은 초대 받았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13개국 중 미국, 영국, 룩셈부르크, 칠레, 르완다, 프랑스, 호주, 리투아니아, 아르헨티나, 대한민국 이상 10개국이 북한 정권의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의견 논의에 수용적임을 밝혔습니다. 프랑스와 칠레가 가장 강력한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요르단 대표의 경우 우려를 표하긴 하였지만 애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13개 국 중 차드와 나이지리아만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제소를 위해선 9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계속해서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권이사회와는 다르게, 안보리는 한 국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안보리 상임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북한 유엔 대표부는 회기 참석 요청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외 귀빈여러분,

연설을 마무리 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뛰어난 저의 동료인 COI 위원들과 함께 저는 유엔 COI보고서가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끔찍한 억압에 대하여 새로운 전환기를 성공적으로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이 중대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상황의 위중함은 과대평가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상당한 국제적 제재를 받는 고립된 국가입니다. 너무나도 편협한 북한 정권은 수십 년 동안 북한주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짓밟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전환점이 지속되고 강화되며, 모든 유엔 회원국이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행동해야 할 때가 도래

했습니다.

저는 북한 주민들이 궁극적으로는 변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는 어렵고 복잡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고통이 끝날 때, 국가건설이 새로이 시작될 것이고 북한 주민들이 겪은 인간적인 고통에 대한 치유도 시작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COI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수십 년 동안의 국가선전, 억압 및 한반도 주민의 두려움에 특히나 주목했습니다. 두 개로 분리된 민족을 화해시키는 것은 매우 엄청난 임무입니다. 북한 주민이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와 공적 영역의 참여라는 자유의 차이점을 깨닫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어떠한 방식이든, 변화가 일어나고 나면, 국가의 물질적 번영을 위해, 김일성주의의 사회적, 경제적 유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일성주의의 정신적이고 영혼적인 영향을 다루는 것이 더 어려운 난제가 될 것입니다. 수세대가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재화 되어 있는 것이 다뤄질 때까지, 고통, 분노, 좌절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한민국의 시민사회 단체, 학계 및 많은 사람들이 통일과 통일의 과제 및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입니다.

통일에 대해서는 독일이 과거 이 문제를 해결했던 인상적인 방안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는 북한 내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국제사회, 민주 국가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러한 엄청난 노력에 있어 한국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어 영광이며, 이번 심포지엄에 초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션 1


북한주민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역할

사회: Matthias Nass (Die Zeit 기자)

패널: 홍성필 (연세대 교수)

Klaus Hoffmann-Holland (베를린자유대 인권대학원장)

Marcus Löning (연방정부 전 인권특임장관, 2010 ~ 2013)



1세션 주요내용

❖ <북한주민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역할>

-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문제에 침묵했다. 독일도 방북 노력을 하였으나 북한으로부터 거절당하며 무력감을 느꼈다.
- 북한인권 문제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한 원인은 냉전구도에 따른 문제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해 정보 확보의 어려움과 북한자극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 북한정권 인권침해 가해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 동안의 전례를 볼 때 국제공조가 중요하다.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며,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도록 하고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

북한주민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역할



● 사회자

-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 서유럽 국가의 무관심, 실질적인 북한의 인권침해 정도와 범위 등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이 원인이다.
- 이런 측면에서 최근 UN COI(United Nations, Commission of Inquiry,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매우 중요한(환영할 만한) 업적이다.
 - 조사보고서에는 권고사항 뿐만아니라 국제사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런 맥락에서 이 세션의 주제인 국제사회의 역할에 대한 토론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그동안 왜 전 세계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침묵을 했다고 보는가?

● 퇴닝

- 침묵으로만 일관하지는 않았다고 본다. 유럽국가의 관점에서는 북한이라는 나라는 너무 멀었고 정보가 많지 않았으며 북한이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이 가장 극심하였기 때문에 공론화할 수 있는 기회가 오래 걸렸다고 생각한다.
-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agenda로 채택하면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UN조사 등의 보고서를 통해 공론화되었다.

● 사회자

- Markus Löning씨는 실제로 인권 특임관으로 재임하셨었는데 그 당시의 주요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 퇴닝

- 당시 실제 북한에 입국해서 인권의 침해 현장을 파악하고 싶었고 방문하고자 노력했지만 북한측으로부터 UN결의안 채택에 대해서는 포기해야한다는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인권특임관으로서 무력감을 느꼈다.

● 사회자

- 한국에서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어떤식으로 보고있는가?

● 흥성필

- 1996~7년부터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다만 그 당시에는 냉전체제의 부산물로 인식을 하고, 인권의 관점에서 보지는 않았다.
- 세계 각국에서도 각 나라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당면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 한국 정부의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분리하여 보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사회자

- 한국에서는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어떠한가?

● 흥성필

- 일단 하루하루의 생활에 바쁘다보니 북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 기존에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나쁘다”라는 인식이 있었다면(즉, 북한의 인권 상황이 나쁜 이유를 잘못된 북한의 공산독재정치에 대한 비판으로 인식) 현재는 “북한 인권 상황이 매우 안좋다”라고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다만 그 개선 방법과 방법(대안)들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 사회자

- 북한은 현재 방문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권 침해 현장을 파악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따른 문제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 홀란드

- 객관적인 사진이나 자료가 없어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추상적으로 볼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 그런 측면에서 UN COI의 조사보고서는 객관화되고 수치화되어 침해 상황을 기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 북한의 경우 침해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범죄로 인식할 수 있는 장치를 없애버렸다.
- 사진을 통하여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고, 시각적으로 언어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 사회자

- 역사적으로 한국에서는 군사정권 시절에는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DJ정부의 햇볕정책에서는 북한과의 화해와 협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 신장에 가치를 두는 것에 딜레마가 있지 않았는지?

● 홍성필

-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는 남한에서도 인권침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관심은 여력이 없었다고 본다.

- DJ정권과 노무현정권에서도 경제교류협력에 더 집중하였고 북한의 인권 신장(개선)에 대해서는 부수적인 사항으로 인식했다.
- 이제는 북한 인권 상황과 인도적인 지원과 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은 있지만 방법은 존재한다. 중요한 것은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전략이 부재하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본다.

● **사회자**

- 북한은 왜 변하지 않는다고 보는지? 북한의 강력한 지원자이자 영향력을 주는 중국도 변하고 있는데 그런 영향이 왜 북한까지 미치지 못한다고 보는지?

● **홍성필**

- 북한은 동구권의 나라들과 비교가 불가능한 철저하게 폐쇄된 나라이다. 소련의 영향을 받았던 구 동구권 나라의 상황과는 매우 다르다.

● **사회자**

-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UN COI가 제시한 바와 같이 UN 안보리 개입을 통하여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지?

● **홀란드**

- 유엔 안전보장회의 제7조에 따라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만장일치가 되면 국제형사재판소에 맡기면 된다.
-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반대가 예상되므로 중국의 결정이 중요하다.
 - 중국의 경우에는 북한의 인권결의안을 채택하면 자국(중국)의 인권 침해 문제 해결에

대한 압박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쉽지는 않을 것이다.

- “처벌의 종결”이라는 맥락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의 종결을 위해서는 국제 법정에서 논의가 필요하고 인권침해 문제는 자국(북한)에서도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볼 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처리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 사회자

- 이에 대해서 독일의 역할로는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 뢰닝

- 일단 독일이 UN COI의 설립을 지지했다는데 의미가 있고 그런 맥락에서 EU연합 차원에서도 지원을 했다고 볼 수 있다.
- 중요한 것은 국제형사재판소로 회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 중국의 거부권(VETO)이 예상되므로 어떻게 회부할 지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전략을 통하여 장기적이고 좀 더 효과적인 대안이 있을 수 있도록 UN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정치적으로 미디어를 통하여 알리면서 상호보완적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사회자

- 유엔은 독재자들의 전범행위에 대해 ICC에 회부한 여러 사례들이 있다. 어렵고 오래걸리는 하겠지만 북한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책임 추궁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 홀란드

- 국제법적으로 보면 ICC 재판소에 사건(CASE)으로 회부될 수 있으나 그 과정은 매우 장기화(ICC의 증거조사 등으로 인한)될 것으로 보이지만 말씀대로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 사회자

- 많은 북한의 탈북자들이 중국을 통해 입국하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인권침해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에게 어떤 요구를 해야할 것인가?

● 홍성필

- ICC에 회부를 하려면 안전보장이사회가 기소를 해야하므로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 실질적으로 탈북자에 대해서는 중국이 인권 침해 가해자이므로 이에 대해서 중국이 책임감을 느끼고 개선하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다.
- 중국 정부에 북한주민의 인권 침해에 대해 일정한 책임감이 있음을 명확하게 알리고 ICC 회부는 당장 어렵겠지만 9월~10월에 있을 UN총회에서 중국과 안보리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

● 사회자

- 구체적으로 중국은 어떤 일을 해야하는가?

● 홍성필

- 중국은 탈북자를 강제송환하는 것을 멈추고, 유엔난민기구의 존재를 인정하여 탈북자를 제3국 또는 남한으로의 망명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 중국은 국제법을 어기고 있고 북한 당국과 공조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에 동참하고 있다.

● 사회자

- 중국을 통하여 북한에게 압력을 가하는 방법은 없을지?

● 패널

- 중국을 통한 압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북한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압력에 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사회자

- 북한은 완전 통제와 억압의 나라라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남한과의 교류 수단을 압력으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는가?

● 홍성필

- 중국의 핑계는 굉장히 다양하므로 중국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그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또한 북한의 인권침해와 관련해서 개인 책임자를 언급하여 사치품 구입, 은행계좌 개설 및 해외여행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있는 입법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사회자

- 직접적인 압력 방법은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 홀란드

- 모순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 불처벌의 종결을 위하여 국제법적으로 체포를 청구하되, 북한 주민들과는 많은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국제법적으로 처벌 가능성을 제시하고 협력을 추구하면서 북한 내 저항세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사회자

- 화해와 긴장(법적인 처벌)의 두 가지 방안이 북한에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인지?

● 홍성필

- 효과성 또는 가능성의 문제와는 별도로 남한 정부는 그렇게 이중적인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 북한의 경우 개혁 또는 개방 대신에 핵무기 개발을 택하였고 봉건주의적 전제주의적인 정치적 학습이 되어서 북한 주민이 정보를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정권을 붕괴할 수 있을 만큼의 tipping point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 공산당 정권과 250만명의 평양주민이 나머지 90% 북한 주민을 억압하고 있는 특수성이 있다.
- 북한이 바뀌어야 할 것은 북한 자체라고 본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철폐하라는 식의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요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청중

- 북한의 인권 침해를 논의할 때 정치적인 인권 외에도 경제적 인권 침해 측면이 있다고

본다. 국제사회에서는 어느 것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

● 패널

- UN의 조사보고서에서는 정치적, 경제적인 인권문제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 중국의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권이 개선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의 기아나 수용소 등에 대한 사진들, 즉 객관적인 정보 공유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 청중

- 이 토론 자리에 북한 대사관 관계자의 공식적인 초청은 없었는지?

● 베를린자유대학

- 메일을 통하여 행사 개최를 알렸으나 공식적인 대답 또는 반응은 없었다.

● 청중

- UN COI보고서 자체가 국가안보리 개입을 통하여 ICC에 회부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 패널

- ICC에 회부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회원국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하지만 북한은 회원국이 아니므로 의미가 없음), 소송제기자가 수사를 진행하는 것(제한된 회원 지역에 한하므로 의미가 없음), 마지막으로 안보리의 의결(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을 통하여 ICC에 회부하는 방법이 있다.

● 사회자

- 북한이 만약 대화를 요청해 온다면 어떤 부분을 언급하고 싶은지?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뢰닝

- 최종 목표는 UN COI의 보고서와 같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스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흥성필

- 북한과 그런 대화가 가능하다면 “정치범수용소에 있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즉, 인권 침해의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홀란드

-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은 어렵지만, 한 가지를 선택해야한다면 북한의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요청함으로써 민주화 또는 인권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세션 2


서독의 대 동독 인권정책 시사점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 방안

사회: Sven Hansen (TAZ 기자)

패널: Ekkehart Krippendorff (베를린자유대 교수)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Richard Schröder (전 동독 인민회의 시민당 원내대표)



2세션 주요내용

❖ <서독의 대 동독 인권정책 시사점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방안>

- 서독이 정치범을 돈을 지불하고 데리고 왔는데 주로 민간차원(교회)에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 동서독은 상호 방문이 가능했으며 서로 대사와 상주대표부를 두고 대화를 지속했다. 하지만 남북한은 서로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 서독의 좌파진영이 동독의 인권문제를 너무 부드럽게 다루었는데, 좀 더 강하게 다루었어야 한다.
- 남북간 문화교류가 북한인권 개선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지금은 중단상태이다. 하지만 천년의 역사를 함께했기 때문에 동질성이 강하며, 이는 통일 후 통합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 동서독의 경우 상호 약속을 철저히 이행했다. 북한이 남한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야 발전이 있을 것이다.

서독의 대 동독 인권정책 시사점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 방안



● 한센

독일의 경험에서 인권문제에 대립이 있었는가? 인권이 국가간 전쟁의기를 고조시켰나? 평화적 상태가 자연적으로 인권을 개선하는가? 두 가지가 대립하고 있다. 서독이 동독의 인권문제를 어떤식으로 다루었는가?

● 크리펜도르프

문제가 있었다. 인권과 서독은 그리 깊지 않다. 인권이 정치전략에 속해있지 않았다. 변화를 통한 접근은 있었지만, 인권 보호라는 항목은 없었다. 인권 자체를 생각해 보자. 인권은 하늘에서 떨어진게 아니다. 정신, 정치역사 속에서 서독정부의 전략 같은 정책이 들어간게 아니다. 서

독의 헌법, 제 1조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불가침이라는 조항이 세계 최초로 들어가 있다. 당시 서독정부가 인권을 위주로 한 정부는 아니었다. 통일문제는 인권문제와는 별도의 문제였다. 민족 정체성 문제였지 동독의 인권침해 문제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었다. 서독의 정책에서 인권의 역할은 거의 없었다. 최근에 들어서야 인권이라는 것이 논의되고 토론이 되었다. 인권과 시대적으로 연결된 것은 1975년 헬싱키부터 코흐 3, 국방강화, 국제경제적 협업, 제3부인 헬싱키 원칙에 따라 여행의 자유와 연결되어 있다. 뒤늦게 인권이 정치의 일부가 되었다.

● 한센

그 이유는?

● 크리펜도르프

50년대에 국제사회는 항상 냉전이라는 틀 속에서 움직였다. 냉전속에서는 인권은 도구적 역할밖에 못했다. 1975년에 헬싱키가 있었고 이후 지미 카터가 인권문제를 부각시켰다. 소련을 비판하는 도구로 언급하기 시작했고, 인권을 보호하지는 못했다. 서독정부는 인권 이야기도 안 했고, 칠레의 독일인을 보호하지도 않았다. 한국은 아직도 북한과 공동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인권을 그 가치관에서 바라보면 새로운 문제이다. 가치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한센

동독의 인권에 대한 서독정부의 정책은?

● 슈뢰더

처음엔 없었다. 상호 불인정하는 정책이었다. 장벽을 넘어 정치범을 도우려는 노력은? 교회에서 역할이 컸다. 서독정부는 나중에 개입하고 넘겨받았다. 인권 자체가 헬싱키 의정서를 통해서 언급되기 시작했다. 상호 방문할 수 있는 것이 큰 역할을 했다. 처음에는 방문 자체가 금지였지만, 친척방문 제한이 있었다. 우편이나 전신 교환만 지속되었다. 그게 한국과의 차이점이

다. 특히 인간의 상호만남을 통해 많은 것이 있었다. 크리스마스 휴가 즈음에는 가족을 만날수 있게 허가증을 받을 수 있었고 점차 정례화가 되었다. 정년퇴직을 한 사람들에게도 허용이 되었고, 동독 지역 사람이 긴급시에 서독 방문이 가능했다. 기회가 점점 넓어졌다. 학생들도 갑자기 기회를 내서 일주일간 이동이 가능했다. 긴장완화에서 더 중요한 것은 정보교환이다. 서독 방송을 들을 수 있었다. 호너커 때에도 서독방송 시청이 불가능했으나 그래도 서독 TV를 봤다. 당 간부들은 서독 TV를 볼 수 없었다. 그 자녀들은 학교에서 TV 이야기를 못했다. 그러나 깊은 산골에서도 서독 라디오를 들을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동독과 서독 사이에 무역이 있었다. 의료사업이나 의약품과 관련해서 협상을 통해서 구동독 처방전을 갖고 서독에서 약을 보내주는 것이 가능했다. 동서독 완화정책을 통해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있었다. 구동독에게 중요한 것은 인정을 받는 것이었다. 호너커는 언젠가 서방을 방문하고 싶어했고 미국을 공식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 한센

통행증과 관련해서 여행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허가 받았는데, 헬싱키는 유럽의 분단도 인정을 했다. 구동독을 그 자체로 인정한 것이다.

● 슈뢰더

구동독이 완전히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냥 상호의 지위를 있는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동독은 본에 대사를 파견했고 서독은 상임대표부를 동독에 보냈다. 상임대사는 외교부 소속이 아니었고, 본에 있던 동독 대사는 외교부 소속이었다. 되돌아 볼 때 이는 나쁜건 아니었다. 의견을 통합할 수 없을 때, 서로 의견이 너무 다를 때, 이야기를 못하겠다는게 아니라, 나름의 생각이 있지만 게임의 룰은 지켰다. 대사는 아니지만 대사처럼 활동했던 상임대사가 그것이다. 완전히 서로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 슈뢰더

헬싱키 프로세스가 핵심인데, 당시 국경 자체는 불가침이라고 한 것이다.

● 한센

구동독에서는 말도 안된다고 했나? 헬싱키에서 버켓 3를 얻었으니 괜찮다고 했는가?

● 슈뢰더

아테나워 정책은 구동독을 판코우 정부라고 했고, 개선을 원했지만 아테나워 정부는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접근을 통한 변화라는 정책이 오면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긍정적이라고 생각했다.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를 체험하게 된 구동독도 원하는게 있었고 접근을 통한 변화가 있었다. 동독은 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었다. 돈 뿐만 아니라 명예도 중시했다. 정치범을 산 것은 서구의 앰네스티도 중시했기 때문이다.

● 한센

어느 규모인지?

● 슈뢰더

63년부터 89년까지 3만3천500명 정도의 수감자가 서독으로 석방되었다. 비용은 4만에서 10만 마르크를 지불했고 370만 마르크가 소요되었다. 왜 앰네스티가 왜 필요했을까? 자신들의 인정과 관련된 것이다. 석방을 했으니 우리에게 정치범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에서도 가능할지 모르겠다. 동독은 자신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단계였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자본 유입도 중요하지만, 인권향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뭔가 구체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 어떤 비즈니스의 성격이 있어야 한다. 국제형사재판소가 과연 북한 국민의 생활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걸 비판을 하면 북한 주민의 삶이 증진이 될까? 잘 모르겠다. 굉장히 어렵지만 제 경험에 따르면 주민들을 위한다면 독재자를 제거할 수 없을 경우 비즈니스 딜을 해야 한다. 그런게 없으면 완화정책 이전의 상황이 된다.

● 한센

공통점과 차이점.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 김동춘

동서독과 한반도의 공통점은 냉전이다. 대결 체제에서, 냉전 하에서는 인권이 정치체제 문제와 구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른 점은 한국은 북한과 전쟁을 겪었고, 전쟁 후에 휴전상태에 있다. 독일로 말하면 빌리 브란트 이전의 상황이다. 유엔에 동시에 가입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남한을 혁명의 대상으로 한다. 60년대 후반까지 경제적 우위에 있었던 북한은 80년대이후 역전이 되면서 거꾸로 되었다. 북한이 방어적인 남한에 비해 더 공세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남한에서는 국가보안법으로 북한도 노동당 규약으로 상대를 없애려고 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대를 없애려고 했다. 국방부 대변인이 북한은 없어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확장기로 북한을 경고하는 일도 있었다. 전쟁선포와 비슷한 것이다. 며칠 전에 북한에서도 박근혜 정부에 대해 공격적인 발언을 했다. 한국어로는 욕에 가까운 공격이다. 전쟁상태에 있는 국가의 내부분쟁에 대해 인권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다음은 인권 개념이다. 한국에서도 전통적으로 인권 개념이 있지만, 서구 인권은 개인주의에 기초하고 있고, 소유권, 표현, 사상에 대한 권리가 발전되었지만, 한국은 그런 인권 개념은 약하다. 식민지 하에서는 독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분단 상태에서는 북한은 여전히 민족개념으로 인권에 접근하며, 남한은 식민지라고 보는 것이었다. 남한의 인권문제는 70년대 이후 민주화운동에서 나온 개념이다. 박정희 정권은 카터로부터 비판받은 정권이다. 전두환 정권도 인권침해로 비판받았다.

● 한센

서독에서는 좌파 정당이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어려워했다. 한국도 비슷한가? 북한의 인권 침해는 한국의 진보당에서 이슈가 안된 것인가?

● 김동춘

한국의 야당은 서독 사민당 형태인데 그보다 보수적인 성격이다. 링케는 한국에 존재 하지 못한다. 한국 야당은 기본적으로 사민당보다 보수적이다. 그걸 전제로 한다면, 한국의 진보적 그룹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남한내에서의 인권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고, 그 이후에도 서독수준의 언론의 자유나 인권 자유가 여전히 보장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체제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인권문제를 이야기하기가 어려웠다. 진보세력의 입지가 굉장히 좁았다.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것이 사상의 선택문제가 된, 신앙고백을 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김대중 정부 이후에는 화해 정책을 폈고, 민간에서도 김대중을 지지한 진보그룹은 북한과 화해한 상태에서 북한 내부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화해를 깨는 것으로 인식했다. 북한은 인권문제를 체제 위협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인권문제가 제기되기 이전에, 노무현 정권 내에서 야당이나 구 민주화운동에서도 침묵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북한을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진보와 북한과 선을 긋는 진보가 갈라지는 흐름이 생겨났다. 남한내 세력은 북한인권 문제를 이야기하더라도 책임을 질 수 없다.

● 한센

책임을 져야한다니?

● 김동춘

책임을 북한인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북한인권 문제의 상당부분은 북한체제 자체와 경제붕쇄와 체제위기의 상황속에서 나온 것이다. 이를 전혀 건드릴 수 없는 상태에서, 경제붕쇄를 완화하거나 핵개발을 중지하게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인권문제 제기는 북한내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

● 한센

이해는 안가지만 흥미롭다. 70년대 인권은 투쟁적 개념이었다. 서독의 좌파는 동독의 인권문제를 부드럽게 다루었다. 좌파와 우파가 동일한 노선을 지켜갔다. 인권문제를 더 강력하게 다뤘다면 좋았을까? 녹색당은 서독 좌파가 인권을 무시했다고 한다.

● 크리펜도르프

제일 큰 잘못이었다고 생각한다. 반공주의를 싫어했다고 인권문제를 너무 부드럽게 다룬 것이 우리의 잘못이었던 것 같다. 역사적 회고를 간단히 하고 싶은데, 잊어선 안될 것은 90년대 중반까지 서독은 동독과 분리적 사상이었다. 동독에 가는 것을 안 좋아 했다. 50년대까지 서독의 악몽은 공산주의가 독일 전역을 점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동독의 세계 청소년 행사 때 빨간 물결이 서독으로 넘어올까, 향후 20년에 공산주의 청소년이 생길까 두려웠다. 이후에는 바뀌었다. 동독의 헌법에도 냉전당시, 하나의 통일 동독으로 정의되었다. 서독도 마찬가지로 통일 독일을 명시했다. 50년대 이후로 서독과 분리를 시켰음. 동서독에 연결을 했던 두개의 국가였지만 문화가 그 교각 역할을 했다. 이 패널에 기여하기 위해 문화에 기반한 인권도 있다고 말하고 싶다. 문화의 인권은 동서독이 공동으로 정부에 대항하는 것이다. 괴테 협회가 있었다. 분단되지 않은 협회. 괴테 협회는 단 하나였다. 매년 총회를 열었고 동서독의 문학인들이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 문학 창조자들이 우리가 공동의 언어를 가졌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은정 선생님 6년전 발표 논문과 비교해 지금은 어떻게 평가하시나? 남북한은 서로 상이한 문화로 분리되어 있는가? 고은이라는 시인은 우리 공동의 언어가 없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공동의 언어를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극복할 과제이다. 문학과 비평의 경우 동독과 서독문학이 별개로 말하지 않았다.

제가 프랑크푸르트 독서박람회에서 놀란 것은 한국작가들의 소개글들이 분단을 주제로 한 작가가 한명도 없다는 것이었다. 산업화 비판, 사회 비판은 있지만 분단비판은 딱 한 작가였다. 더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남북한 공동 전시회나 같이 작업할 수 있는 워크숍 공간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동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공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치적 발언이 내재되어 있다. 문학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라고 호소하고 싶다. 통일을 이념, 정신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무엇인가? 동서독이 별개의 문화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 한센

김교수님께 문화와 양국의 관계에 대해서 공동성, 가치 외에 더 발전시킬 것은 무엇이 있는 지? 한류? 변화의 가능성과 문화의 힘은?

● 김동춘

남한 대중가수들이 북한에서 공연을 했고 북한 사람들이 좋아했다. 케이팝은 모르겠고, 남북한 문화인들의 교류도 꽤 있었다. 김대중 정부 이후 남북한 국어사전 만드는 학자 교류를 비롯해, 역사학자들, 문화인 교류, 축구대회도 있었다. 지금은 거의 다 중단이 되었고, 짧은 10년간 있었지만, 거의 과거로 되돌아 갔다. 문화인 교류는 거의 없다. 한국은 통일된 역사가 훨씬 길다. 1천년간 같은 언어, 문화로 살아왔기에 보는 각도에 따라 분단의 역사는 길어도 동질성은 훨씬 많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 정치 이념은 달라도 문화적 동질성은 훨씬 강하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너무 적대적이어서 문화인들이 접촉가능성이 거의 없다. 북한도 문화인들이 독립적이지 않고, 남한은 북한보다 자율성이 있지만, 최근에는 문화인들도 이념의 잣대로 친북 작가라고 냉전적으로 접근을 하여 문화인들의 자율성도 줄어들었다. 남북한의 화해를 주제로 한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졌지만 거의 모두 중단된 상태이다. 문화 교류가 중요하지만, 한국은 정치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북한은 체제 자체의 생존 위기에 몰리고 있다. 북한이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말하더라도, 그 체제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생존을 위해 무엇이건 한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한센

영화 이야기를 했는데, 문학은? 분단을 주제로 하는 문학은?

● 김동춘

한국에서 60년대에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소설이 있다. 분단문제를 다룬 소설이다. 노벨상 받을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작품이 매우 많다. 북한에서도 분단을 소재로 하지만, 체제 옹호

적이다. 북한 역사 소설은 한국에서도 번역된 적이 있다. 전쟁의 비극, 이산가족 소재 문학은 매우 많다. 국제사회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청중 질문〉

● 페니히

자유대학에서 아시아, 동남아, 일본, 한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북한 정권은 부정적으로 볼때는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고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럼 우린 무엇을 할 수 있나? 전쟁으로 파괴? 아니다. 독재자가 있다면 협상을 해야할 것이라고 슈뢰더씨가 말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변화하려 했던 것과 관련해 유럽에 사례가 있다. 그런데 공동의 가치가 있는가? 가치나 문화, 언어가 제대로 작동을 하면 정치적 차이가 아무리 커도 그 무엇인가가 서로를 묶어 줄 수 있다. 독일의 사례에서 흥미로운 것은 괴테협회 뿐 아니라 동독의 비판적 작가들이 서독에서 발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제가 행사 올 때 마다 80%는 늘 북한과 한국의 차이를 말했다. 북한은 동독과 다르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 주민과 지도부가 분단이 길어질수록 할일이 많아진다. 공동의 가치가 무엇인지. 에곤 바가 분단이 20년 더 지속되었다면 통일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상황 자체가 고착화 되어 우리가 굳이 통일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한국도 고착이 진행중이다. 문화적, 지식인적 접근과 교환이 중요한데 그게 안되면 깰러리나 장학금으로 독일이 지원해야 한다. 한국과 북한의 사람들이 독일에서 자리를 마련해줘서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먼저 통일한 국가로서 한국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슈리더의 말처럼 폭력이나 전쟁으로는 북한을 바꿀 수 없다. 북한도 관심사가 있다. 경제적이건 무엇이건 분단이 고착된 상황에서 서로의 공통점 고민해야 한다. 차이점만 강조해선 안된다.

● 이은정

포커스가 한국과 독일 통일비교가 된듯하다. 도르프 교수님께 말씀을 들으려 했던건, 서독 지식인으로서 무엇을 잘했나 못했나 이다. 서독 지식인들이 인권문제에 대해 어떤 논의를 하셨

는지? 누구는 적극적으로, 누구는 소극적, 그런 토론이 중요하다. 한국에서 비판적 지식인들이 이런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체제만 중요한지? 레벨을 두개로 두어 인권문제를 따로 접근할 것인지? 문화와 통일도 중요하지만, 구서독, 동독의 지식인으로서 인권문제에 어떻게 접근하셨는지 아는게 중요하다. 김교수님은 한국의 지식인들에게 많이 알려 주실 수 있을 것이다.

● 크리펜도르프

이야기는 다소 복잡하다. 인권문제를 하나의 가치로 보면, 가치는 어디서 나오고 가치는 누가 정의를 하느냐? 이런 모든 가치는 문화에서 나오고, 문학에서 나온다. 한국 전시회 가신분? 아무도 안갔다. 당신들이 잘못된 것이다. 다들 전문가들인데, 본인들의 문화전시회를 가지 않은 것이다. 문화는 아래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이은정 선생님이 발표했다. 그럼 진보적 국민문화는, 진보적 측면이 무엇이 있는지 질문하고 싶다. 케이팝을 듣고 싶어 하는데 북한에서도 들을 것이다.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공통의 언어를 만드는 밴드가 있다. 문학, 케이팝, 고전음악도 마찬가지이다. 양국이 공동으로 음악을 하면 전쟁이 나지 않는다. 지식인들이 할 수 없는 언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저는 언어로서의 문학, 내재된 언어를 메시지로 남기고 싶다. 전시회에 참석하시길 권한다. 북한 예술가 한분, 두분의 한국 작가들이 공통의 아틀리에를 운영하는 계획을 생각해본다.

● 한센

1970년대 지식인들이 역할은?

● 크리펜도르프

모호하고 양면성이 있었다. 반공주의자로 낙인찍히고 싶지 않았다. 좌파 지식인으로서, 동독 정권 반대자들에게 거리를 두게 되었다. 동독정권의 저항세력을 오히려 멀리했다. 여기에 큰 역할을 한 곳은 교회였다. 동서독의 관계속에서 종교와 교회가 큰 역할을 했다. 대안을 제시한 곳이다. 서독 정부 총리, 대통령도 모두 동독 출신이다. 그게 당연한 건 아는데, 우리가 성공했다고 본다. 좋아하진 않지만 (웃음) 의미가 있다고 본다. 문화차원에서 작업을 해야지 정치적인

것은 사실 비교적 간단하다. 중국과 북한은 국경이 맞닿아 있으므로 중국은 통일을 안좋아한다. 미국이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적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문화적 변화와 문화적 기반이 중요하다. 이러한 기반 없이는 북한 정권이 자유화되지 않을 것이다.

● 슈뢰더

문화를 너무 신비화 하는 것 같다. 문화적 관계는 매우 중요하지만 오케스트라가 중동문제의 해결방안이라고 간주하지 않는다. 눈에 그렇게 안보인다. 팔레스타인과 유대인이 함께 공연하고 합주하고 두 나라가 화해하는 희망을 갖는 것은 좋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다. 중동을 개선하기 위해 그 수백개의 바렌 보임 오케스트라를 바라지 않는다. 현실 정치가 필요하다. 문화 예술 교류도 좋고 바람직하지만 실질적 접근이 없다. 1989년 가을에 작가들, 화가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진 않았다. 동독 예술가가 나중에 엄청 후회했다. 큰 그림을 봐야하는 것은 비어만 사건을 통해 많은 동독작가들이 서독에 와서 작가활동을 하고 독자 확보 증명을 했다. 이 경험이 더 중요하다. 동독작가가 서독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동독에서는 출판되지 않는 작품을 서독에서는 출판이 가능하다. 남북한의 접근 상황에 있어서 문화 차원 말고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북한 정권이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약속을 안지킨다. 동서독 관계는 서로 아무리 싫어해도 약속은 지켰다. 상대방을 계약자로 인정했다. 화해 정치의 기반은 동독이 약속을 지켰다는 것이다. 북한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북한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 한센

미국도 마찬가지로인가?

● 슈뢰더

미국도 어겼다고 하는데, 북미 계약이 파기되었는지는 모른다. 북한 정권이 약속을 전혀 실행하지 않는 예들을 알고 있는데. 제가 받은 인상을 말씀드린 것이다. 동독과 북한의 큰 차이는 계약과 약속 이행이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건, 결국은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는 계약을

누가 서명하겠는가? 화해합시다 라고 한 후 2년 후에 넌 수감된다. 누가 계약을 하겠는가?

● 한센

호너커는 감옥에 갔는데?

● 슈뢰더

계약은 콜과 고르바초프 간에 한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처벌 비처벌을 조건으로 걸지 않았다. 고르바초프는 아예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에서 발포명령을 한 사람들이 수감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으나, 법치국가의 절차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해서 수감자 수가 적었다.

● 한센

북한이 국제협약을 잘 지켰는지?

● 김동춘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자신이 없다. 국제사회에서 룰을 지키는 행위자가 아닌 것은 사실이다. 누가 먼저냐라고 하면 복잡한 문제가 된다. 누가 먼저냐라는 게임이 정전협상 위반부터 지속되어온 것이다. 결국 체제의 문제로 되돌아간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휴전협정에서 미군이 주둔 안하기로 했는데 주둔하는 것과 90년대 이후 북한이 핵문제 규범을 계속 위반해온 것 등 어느 쪽이 국제규범을 더 위반했느냐는 약간 무의미한 문제이다. 북한은 정책 선택의 폭이 매우 좁다. 9.11이후 이라크와 악의 축 발언과 정권교체 발언이 나온 이후 체제 생존이 보장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체제붕괴 전제 위에서는 합리적 협상이 어려워진다. 북한의 상대는 남한이 아니라 미국이다. 미국이 이라크나 리비아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아니까 협상이 어렵다. 핵을 폐기하면 체제가 없어질 수 있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인권문제도 어떤 압력이 있어도 경제적으로 살면 이 체제가 계속될 것이다. 체제를 변하게 할 수 있는 지렛대는 미국과 남한이

취고 있다. 지금은 한국이 경제적 발전국가가 되어 한국정권의 입장이 북한 변화의 가장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 어린아이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자존심은 상하지 않게 다뤄야 변화가능하다. 밖에서 널 없앨 수 있다고 압력을 해도 중국이 체제를 보장해주면 체제는 안바뀐다. 북한 사회도 중산층이 형성되고 있으니, 아래로부터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정권 붕괴는 동북아 전체에 엄청난 고통을 줄 것이다. 유리그릇을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다.





세션 3


해외 체류 탈북자 인권상황과 보호 방안

사회: 김정안 (동아일보 기자)

패널: 이은정 (베를린자유대 교수)

Beate Rudolf (독일 인권위원장)

윤남근 (인권위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3세션 주요내용

❖ <해외 체류 탈북자 인권상황과 보호 방안>

-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며 국경 단속을 강화하여 탈북이 힘들어지고 있다.
- 중국은 탈북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탈북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송환 시 정치적 처벌을 받으므로 난민으로 보아야 한다.
- 중국이 COI설립을 반대하지 않고 COI의 결과보고서 작성에도 반대하지 않았다. 이는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 최근 북한이 재입북한 탈북자들을 동원하여 선전을 하는데 이는 북한 정부가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 1989년 서독은 자국 대사관에 들어온 많은 동독인들을 서독으로 데려왔으며 이를 위해 많은 외교적 노력을 하였다. 한국도 이를 본받아야 한다.

해외 체류 탈북자 인권상황과 보호 방안



◎ 윤남근

탈북자와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으로 탈출하는데 성공한 수는 98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900여명, 2005년에는 일년간 약 1천명, 2006년에는 약 2천여명, 2009년에는 2,900여명이 탈북했다. 김정은 정권들어 국경 통제가 심화되었다. 전체 올해 3월까지 약 2만6천명이 탈북해서 한국에 도착했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는 수는 매년 5천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 10만명~20만명으로 추정하는데 라오스나 태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 김정안

김정은 정권들어 탈북자가 줄어든 이유는?

● 윤남근

김정은 정권들어서 경계가 강화되었다. 도의 경계를 넘는데 허가증이 필요한데 보통 뇌물을 준다. 김정은 정권들어 뇌물의 액수가 두 배가 되는 등 통제가 심해졌다는 것이다.

● 이은정

탈북의 의도는 무엇인가? 인터뷰를 해보면 함경북도 출신들같이 대부분 국경지방에서 온 사람들이다. 동기는 정치적인지, 경제적인지 불분명하다. 중국과 북한을 왔다 갔다 한다.

● 김정안

중국이 COI보고서 작성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다. 중국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낼 방법이 있을지?

● 루돌프

인권위가 탈북자의 인권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분단국의 독립적 국가인권위가 인권 피해양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탈북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게 중요하다. 인권의 의무이다. 제네바 난민 협정에 따르면, 정치적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중국이 협정 서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강제송환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강제송환 후 위협이 있다면 송환되지 말아야 한다.

2013년 5월, 탈북청소년이 북송된바 있다. UNHCR, 라오스 외교부에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북으로 보낼 수 밖에 없었다.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 루돌프

각 국가들이 어떻게 의무를 수행할 것인가? UPR이 있다. 모든 국가가 정기 인권보고를 해야 한다. 다른 국가들이 권고안을 내게 되어있다. 인권 침해를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오스가 앞으로 복송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북한이 재입북 탈북자를 동원하여 선전도구로 활용하는데 이는 북한 정부가 국제 사회의 비판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이은정

북한에 인권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준다. 우리가 새로운 전략을 새로 만들어야 하나? 한국에서 북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에 대해 한국에서 뭘 잘못했길래, 왜 한국에서 정착하지 못했는지? 탈북자들이 북한 가족들을 다시 데려오는 경우도 있다. 난민들이 어떻게 도구화가 되는지 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 탈북청소년들은 대안학교에 들어가 있다. 일반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다.

● 김정안

중국에 나와있는 탈북자들의 인권보호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정부가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은?

● 윤남근

탈북자는 다 경제적 이유로 탈북했으므로 난민이 아니라는 것이 중국의 주장이다. 북한은 성분을 나누어 배급을 해주기 때문에 이미 경제적 문제가 정치적 문제다. 국경을 넘는 순간 정치범이 되는 것이다. 구체적 방안은? COI보고서의 의미는? 정치범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유엔이 승인한 것이다. 국내에는 부정하던 사람들이 있었다. 중국을 설득하는게 아니라 압박을 해야 한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주장을 한다면, 짚고 넘어갈 문제이다. 중국에서 강제송환을 안한 사례도 있다.

● 김정안

COI보고서에서 핵심 권고가 있다면?

● 비세르코

필드 오피스를 수립하는 것이 COI 결과보고서의 후속조치를 위해 중요하다. 북한이 아닌 주변국들에 대한 권고사항이다.

● 루돌프

대화를 지속시켜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불법 체류자도 건강과 교육받을 수 있는 아이들의 권리가 있다. 생존을 위한 기본 의료는 모든 사람에게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중국은 난민협약에 서명했다. 중국은 불법 체류자들에게 이를 제공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류의 차원으로 해소해야 한다. 그래서 COI 보고서가 중요하다. 처음으로 북한이 아닌 주변국에 대한 구체적 권고 사항이 담겨있다. 다음은 유엔 회의에서의 논의이다. 탈북자를 송환을 할 경우에 인권이 보장된다는 것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

● 김정안

중국정부가 탈북자에게 잘못하고 있는데 남한정부는 탈북자에게 잘 하고 있는가? 자유와 번영을 찾으러 들어와서 국정원으로 간다. 국정원에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조사를 받는다.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자유가 구속된 상태로 지낸다.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려는 탈북자의 기운을 극도로 쇠약하게 만든다. 동독을 탈출한 사람들은 서독에서 짧게 조사받고 곧바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한국영사관의 태도가 탈북자들에게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비세르코

중국에 있는 난민 중 80%는 여성이다. 인신매매가 되는 등 문제가 많다. 유엔 회원국과 독일

등이 이를 압박해야 한다.

● 윤남근

합동신문센터에서,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이 간첩인지 탈북자인지 신문한다. 긴 기간 동안 조사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나원의 기간은 적응을 위해 필요하다.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사례는 1%이다. 더 잘해줘야 되겠고 개선할 점을 찾아 고쳐나가야 한다.

● 김정안

해외 한국 공관이 탈북자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는지?

● 윤남근

라오스 사례를 말씀드리겠다. 현지에 조사하러 가서 대사관 설명을 듣고 오해를 풀었다. 1년에 1~2천명이 넘어오는데,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보통 잘해왔는데 그 사건만 문제가 되었다고 억울해한다. 중국에 있는 우리 외교 공관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바로 체포된다. 어떤 탈북자는 중국에 있는 한국 외교 공관에 들어갔다가 3년 정도 못나간 경우도 있었다.

● 이은정

이와 유사한 일이 1989년 헝가리 체코의 서독 대사관에서 일어났었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 1989년 여름에 수많은 동독 사람들이 동구에 있는 서독 대사관으로 피난을 왔다. 당시 서독정부가 어떻게 교섭을 해서 큰 갈등 없이 이들을 서독으로 데려올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당시 서독정부는 모든 외교 채널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물론 독일의 경험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도 분명히 중국과 이 문제를 협상할 수 있는 외교 채널이 있을 것이다. 압력을 넣으면서 대화 채널을 넣어야하고,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 1989년 여름 독일 정부의 자료를 보면 동유럽의 서독 대사관에 진입한 탈동독주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독이 어떻게 접근했는지 잘 알 수 있다. 동독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체코와 문제를


해결했다.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중국과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학자로서 말로 하기는 쉬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마무리 토론

사회: 라종일 (인권위 북한인권포럼 대표)



마무리 토론



◎ 라종일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많이 진척되었다. 인권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한다. 긍정적인 진척이 이루어졌다.

독일과 한국이 많이 다르다. 동독과 서독은 통일이 지상목적이 아니었다. 한국은 통일이 지상 목적이고 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다. 자기 위주로 통일하려고 하기에 문제가 무겁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탈북자 문제에 대해 90년대 중반부터, 대기근 이후 연구팀을 중국에 보내 현지 실사를 했었다. 당시 탈북이라고 부르기 힘들었고, 중국과 북한사이는 국경개념이 아니라 생활 벨트 개념이었다. 문화혁명때는 중국사람들이 북한에 와서 식량도 얻어가고, 북한사람들도 어

려우면 중국가고, 생일이 있으면 왕래한다. 당시엔 탈북이라고 부르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국경 개념이 굳어졌다. 2000년대 초에 주로 경제적인 동기로 나왔지만 지금은 동기가 상당히 복잡하다. 중상층 이상이 탈북한다. 자기 자손들 교육 때문에 탈북했다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북한의 고위층 탈북도 상당수에 이른다. 신변불안 때문에 탈북한다. 고위층도 하루 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고위층에서 밀려나면, 현직에서 쫓겨나면 그들은 생활기반이 사라진다. 자기가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겁을 내고 탈북한 경우도 있다. 너무 정치를 개입시키지 않고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동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하다.

북한이 유일하게 명나라때 보가제도를 실시했다. 북한에서 외국으로 관리를 파견할 때 그 가족 중 한 명을 데리고 있는 것이다.

◎ 소나

독일,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 구체적인 방법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투(two)트랙으로 북한에 접근할 수 있다. (인권침해)범죄를 언급하는 한편 대화를 열기 위한 노력으로 북한이 기대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다.

북한에 한 번 변화가 시작되면 새로운 정체성 형성이 필요하며 이는 몇 세대에 걸쳐 노력해야 한다.

서울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만나 증언을 청취할 때 이들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들었다. 한편 이들이 외부세계의 현실에 어둡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유럽의 구공산주의 국가들이 경험했듯 공산주의 국가가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고 변화하는 것은 어려운 임무이다.

◎ 라종일

북한에게 일을 못하게 금지하기 보다 적극적으로 일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김정일의 조카 故이한영의 말에 따르면 북한 최고지도자는 큰 연극의 각본을 쓰고, 제작, 감독이다. 주변은 조연, 국민들은 엑스트라이다. 북한이 아직은 외부와 차단되어 있는데, 유럽에서 왜 대북방송을 안하는지, 국민들의 지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북한 사람들도 접할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 식

량이 없는 것 못지 않은 박탈이다.

◎ 김기원

경제인권, 정치인권, 아마티아 센 독재상태에서는 민주주의가 되어야 경제성장. 경제성장하면 민주화되나? 두가지 관계에 대한 고민을 좀더 깊이해야 한다.


◎ 라종일

미이러를 만드는 비용보다 국민의 복지 비용이 우선되어야 한다. 작년 재작년에 담배와 술수입에 200만 달러를 사용했다. 기초를 충족하면 체제가 안변할수도 있다. 더 나빠질수도. 김일성한테 조총련이 금전적으로 많이 기여했다. 돈을 만들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했었다. 돈을 주면 경제개발을 해칠 수도 있게 된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근본민주주의도 있다. 중국은 많은 수의 대중이 정치에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정보 유통이 커지면, 국민의식이 생기는데, 북한은 그게 없다. 민주화가 꼭 정당과 언론뿐만이 아니라 국민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론보도자료

- 동아일보
 - 연합뉴스
 - NEWS 1
- 



유엔 北인권보고서 이후... 국제사회 전략과 과제

국가인권위원회-베를린자유대학 공동주최

“北인권 침묵 깬 유엔, 이젠 정치범수용소 폐지 나서야”

북한 정부 차원의 반인권 범죄를 인정하고 감정은 정권의 책임을 묻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OOI) 보고서 발간 이후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적극적인 개선 촉구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은 국가인권위원회, 베를린자유대와 공동으로 13일 목요일 수도 베를린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송상현 국제행사재판소(OOJ) 소장, 소나 비제르코 OOJ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베를린 국제심포지엄 1층 회의장에서 열린 이날 심포지엄은 △유엔 북한 인권 조사 활동성과 및 전망 △해의 채류 탈북자 인권 상황 및 보호 방안 △서독의 동독 인권 문제 대응의 시사점을 주제로 약 6시간 동안 진행됐다.



13일 독일 베를린 국제심포지엄에서 열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전략' 토론회 참석자들이 북한 인권 개선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클라우스 홀만트 베를린자유대 인권대학원장, 마티아스 나스 디 차이트 기자, 홍성필 연세대 교수, 마르쿠스 뢰닝 전 독일 연방정부 인권특임관, 베를린=전승훈 특파원 rapy@donga.com

준비해야 하나 된다

통일보이콧 프로젝트

● "이제는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서야"
 현행법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은 올남년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고려대 교수)이 미국 한 개회사에서 "OOI 보고서에서 주목할 것은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 행위가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국제법상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시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비제르코 위원장은 "유엔이 북한 인권 문제의 제로 줄에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확정된 OOJ 보고서는 정치범수용소 폐지, 강제처형 금지 등 북한 인권 상황 개선 권고 288건을 담고 있다. "디 차이트"의 마티아스 나스 기사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에 수십 년간 침묵을 지켜온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클라우스 홀만트 베를린자유대 인권대학원장은 "정치범수용소 등 인권 침해를 고발하는 사진 등 정보가 부족해 사람들의 마음을

北인권 실상 공개에 그쳐선 안돼 中 움직임도록 지속적 압박해야

움직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홍성필 연세대 교수(법학)는 "한국 정부는 북한을 압박하면서도 한편으로 달래야 하는 정책적인 딜레마를 안고 있었다"며 "북한 인권 문제는 정치적 시가지 아니라 인권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로 분리해서 접근할 수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권범죄자 제거할 수 없다면 서독처럼 정치범 석방 협상 필요

윤 위원장은 "한국에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존재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았다. 유엔 보고서가 나와 누구도 이 문제를 부정할 수 없게 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 OOJ 보고서 후속대책 추진과 중국의 변화

북한의 반인권 범죄를 OOJ에 제소하는 OOJ 권고는 토론 시간의 이슈로 떠올랐다. 홀만트 교수는 "OOJ에 제소하는 유일한 방안은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방법"이라며 "그러나 중국이 반대하면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결국 북한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중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국제사회가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마르쿠스 뢰닝 전 독일 연방정부 인권특임관은 "중국에는 정치범수용소가 없는 만큼 북한에

정치범수용소라도 없애라고 촉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베아테 푸돌프 독일 인권위원장은 "독일은 불법체류자도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게 하고 생존을 위한 기본요건을 보장한다. 중국은 제비행악에 따라 탈북자의 강제송환을 멈추고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OOJ 보고서가 북한 인권 범죄에 대한 '네이밍 앤드 셰이밍'(이름 붙이고 칭따구기)에 그쳐서는 안 되며 후속대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동서독 분단시점의 인권보조 경험을 살리자는 제안이 나왔다. 리하르트 슈페더 전 동독 인민회의 사민당 원내대표는 "분단시절 서독 정부는 동독 정치범 3만5000명을 둔 주고 사오는 노력을 했다"며 "독재자를 제거할 수 없으면 비드니스 협상이라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은정 베를린자유대 교수는 "정착에 실패해 제3국으로 다시 망명한 탈북자가 2000명"이라며 "한국의 탈북자 관리 시스템을 되돌아볼 때"라고 진단했다. 베를린=전승훈 특파원 rapy@donga.com·김정현 기자

東亞日報

2014년 05월 15일 목요일 A10면 종합

심포지엄 주요 참석자



윤남근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라종일
북한인권포럼 대표



이은정
베를린자유대 교수



베아테 루돌프
독일 인권위원장



리하르트 슈비더
전 동독 인민회의
사민당 원내대표



마르쿠스 뢰잉
전 독일연방정부
인권특임관

東亞日報

2014년 05월 15일 목요일 A10면 종합

“ICC 나설 수 있게 국제사회 힘 모아야”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

“유엔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조사를 시작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획기적인 일이다.”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사진)은 COI 보고서가 북한 정권을 ICC에 제소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 “ICC는 회원국이 아닌 북한에 대한 재판권은 갖지 못한다”며 현실적인 한계를 시인하면서도 “유엔 안보리가 ICC에 이 문제를 회부해 ICC가 직접 나설 수 있도록 국제여론을 지속적으로 환기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송 소장은 “중국도 국제



여론을 무시하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국제적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변화를 만들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빨리빨리’ 정서가 강하다. 수년간 꾸준히 집념을 가지고 물고 늘어져야 타협을 통한 성취가 가능한 것이 국제사회의 생리”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송 소장은 한국 정부의 지원 방향에 대해 “정부가 나서면 수월한 면도 있지만 지금 국제사회는 정부 외 비정부기구(NGO) 지역조직 및 국제기구 등 수많은 행위 주체가 있다”며 “이를 잘 이용하면 훨씬 더 많은 결과를 낼 수도 있다. 무엇보다 민간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東亞日報

2014년 05월 15일 목요일 A10면 종합

“中, 유엔조사 반대안해... 뜻깊은 변화”

소냐 비세르코 北인권조사위원

“중국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자체를 반대하지 않은 것은 의미심장하다.”

세르비아 인권운동가 출신의 소냐 비세르코 COI 위원(사진)은 북한 인권 유린 상황을 외면하고 강제복송을 지속하는 중국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미묘한 중국의 변화를 짚어냈다. 마이클 커비 전 호주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총 3명의 COI 위원 중 한 명인 그는 유고슬라비아 외교부에서 20년간 근무한 외교관 출신으로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NGO)인 세르비아 헬싱키위원회의 창립자 겸 회장이다.

그는 중국의 향후 역할에 대해

“중국에 인신매매된 탈북 여성들이나 그 자녀들 또한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숨죽이며 살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 지역사무소를 북중 국경지대에 설치해 투명성을 확립하라”고 중국에 권고했다.

비세르코 위원은 또 “COI 보고서 발표로 얻은 추진력을 이어가기 위해 유엔 산하 COI 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하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최근 커비 위원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맹렬하게 비난한 것을 두고 “북한이 그만큼 COI 보고서를 의식하고 국제사회 여론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베를린=김정안 기자

jkim@donga.com



KBS

2014.05.14

베를린 북한 인권 심포지엄 “국제사회가 행동할 때”

독일 베를린에서 북한 인권 국제심포지엄이 열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3월, 북한 인권 보고서를 채택한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즉 COI의 소냐 비셰르코 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인권문제를 의제로 올리고 국제사회가 움직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라우스 호프만 홀란트 베를자유대 인권대학장 등 토론 참여자들도 북한은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제주의 국가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심포지엄을 개최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심포지엄이 EU 국가들의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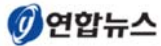
뉴스스

2014.05.14

북한인권개선 국제심포지엄



【서울=뉴스스】 13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 독재청산재단에서 북한인권개선 국제심포지엄이 열린 가운데 (왼쪽부터) 이은정 베를린 자유대 교수, 김정안 동아일보 기자, Beate Rudolf 독일 인권위원장, 윤남근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토론을 하고 있다. 2014.05.14.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인권위, 베를린서 '북한인권 개선' 국제심포지엄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사회주의통일당 '독재 청산재단'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이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전략과 과제' 국제심포지엄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심포지엄에는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과 소냐 비세르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회원, 베아테 루돌프 독일 인권위원장, 윤남근 인권위 북한인권특별위원장 등 국내외 전문가가 참석한다.

COI는 지난 3월 북한정권의 인권침해 행위를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 북한정권에 대한 ICC 제소를 권고한 바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1일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UPR)에서 268개의 북한 인권상황 개선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확정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북한 인권문제는 국제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인권이슈가 됐다"며 "북한 인권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확산하고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noma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4/05/12 10:26 송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 "국제사회가 행동할 때"

국가인권위원회, 베를린서 심포지엄 개최

"중국이 변해야 북한이 변해...중국 압박해야"

(베를린=연합뉴스) 박창욱 특파원 = 지난 3월 북한 인권 실태와 개선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소냐 비셰르코 위원은 13일(현지시간) "이제는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설 때"라고 촉구했다.

비셰르코 위원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가 독일 베를린에서 주최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COI의 보고서는 지금까지 북한 인권 실태를 다룬 가장 포괄적인 문서"라면서 "이 보고서가 유엔 회원국들로 하여금 이 문제를 의제로 올리도록 하고, 국제사회를 움직이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소냐 위원은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가 핵 프로그램 개발에 주목하게 해 지난 수십 년간 인권 침해를 지적당하지 않게 했고, 또한 내부적으로는 북한 주민을 세뇌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확정한 COI 보고서는 정치범수용소 폐지, 공개 처형 금지 등 총 268개의 북한 인권상황 개선 권고를 담고 있다.

COI는 보고서에서 유엔 등 국제사회에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북한 정권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것을 권고했다.

소냐 의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 토론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북한은 세계적으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제주의 국가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토론의 사회를 맡은 독일 주간지 디 차이트의 마티아스 나스 기자는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난 수십년간 침묵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유엔 인권조사위원회가 보고서를 내고 북한 정권에 대한 제소를 권고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세대 홍성필 교수(법학과)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압박하면서도 한편으로 달래야 하는 정책적인 딜레마에 있었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인권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로 분리해서 일관성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클라우스 호프만-홀란트 베를린자유대 인권대학원장은 "북한 주민들이 정보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국제사회가 북한과 문화, 체육 등 비정치적인 교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와 관련 "예컨대 북한에서 월드컵을 개최한다고 가정하면 북한 정권의 모순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주민들이 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중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토론자들이 의견을 모았다.

홍 교수는 "중국은 북한 정보기관과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등 국제법을 어기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역시 인권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할 수 없다면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마르쿠스 로닝 독일 정부의 전 인권 특임관은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같은 경우는 중국에는 없기 때문에 중국이 이 문제부터 관심을 갖도록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cw@yna.co.kr



인권위, 북한인권 개선 국제 심포지엄 개최

'북한인권 개선 위한 국제사회 전략과 과제'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입력 2014.05.12 09:17:23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 '독재청산 재단'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이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뿐만 아니라 유엔, 국제기구, 주변국 및 국제사회의 공조와 지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심포지엄에는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과 소냐 비세르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 베아테 루돌프 독일 인권위원장, 윤남근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위원장 등 국내외 저명인사와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인권위는 심포지엄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관심과 공감대를 확산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방안, 구체적인 실천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COI는 지난 3월 북한정권의 인권침해 행위를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 북한정권에 대한 ICC 제소를 권고한 바 있다.

또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1일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UPR)에서도 COI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등 북한에 대해 인권상황을 개선하라는 268개의 사항을 담은 권고를 최종 확정했다.

pej86@news1.kr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전략과 과제

| 인 쇄 | 2014년 6월

| 발 행 | 2014년 6월

| 발행인 | **현 병 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 주 소 | (100-842) 서울 중구 무교로 6 금세기B/D 11층

| 전 화 | (02) 2125-9842 | F A X | (02) 2125-0918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ISBN 978-89-6114-342-4 93340

사전승인 없이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